

우리말 규범에 대한 반성

안 상 순

(금성출판사 사전편찬실 국어부장)

언어 규범론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의 말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 무규범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서의 순수성도 크게 훼손되어 있다. 많은 언어 대중들은 음절의 長短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하면 합부로 된소리화를 일삼으며 표준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래어를 남발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에 중독되어 있다. 확실히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밤[夜]과 밤:[栗], 말[馬]과 말:[言]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문 성구를 뜻하는 文字[문자]와 단 순히 글자를 뜻하는 文字[문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效果를 [효:과] 아닌 [효:괘]로 소리내고, 燒酒를 [소주] 아닌 [쏘주]로 발음하기 일쑤다. 또 ‘약속을 캔슬(cancel)하다’, ‘필링(feeling)이 좋다’와 같은 덜떨어진 외래어를 남발하고, ‘양복’ 기지, 곤색’과 같은 일본식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다.

말이 사회적 약속에 기초를 둔 것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무규범과 무질서는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말의 혼란은 사회의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언어 규범의 확정한 틀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익히기만 하면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표준 규범이 확고히 서 있는 것일까? 우리는 분명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은 무려 20년 가까운 연구와 검토 끝에 정부가 최근 이룩해 낸 성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1938년) 이후 꾸준히 편찬되어 온 상당한 양의 국어 사전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여러 문법가들의 言語 規範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말의 올바른 표현과 용법에 대해 곤혹을 느낄 때가 많다.

왜 그럴까?

표준어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표준어 규정은 원칙의 수립일 뿐 그 문제의 종결이 아니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일 뿐이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말 어휘 전체가 빠짐없이 하나하나 사정되어야만 한다. 이는 물론 개인이나 사설 단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 표준어가 완전히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 문제는 현재로서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또, 말을 판정하는 최고의 법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전에서도 흠족한 표준 규범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동일한 언어 사실을 사전과 사전이 서로 달리 처리할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현행 사전들은 품사, 맞춤법과 표준어, 발음 등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칫사랑·칫 손님'에서의 '칫'이 관형사인가 접두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그리고 '십 원어치·천 원어치'에서의 '어치'가 접미사인가 의존 명사인가에 대해 그 처리가 사전끼리 상치되어 있다. 표제어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학교, 국민 학교'와 같이 서로 달라, 띄어쓰기의 규범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발음에 있어서도 大學이 [대학]과 [대:학], 資格이 [자격]과 [자:격]으로 그 표시가 엇갈려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준 규범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전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중의 감각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곧, 사전의 표준어를 현실적 표준어로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이는 앞서 얘기한 표준어 문제와 관련된다). 가령, '덩치가 큰 남자'에서 '덩치'는 '덩지'의 비표준어라는 것이 사전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한국인에게 '덩지'라는 말은 생소하기 짝이 없다. 또 사전들은 '입 닥쳐!'에서의 '닥치다'를 '달치다'의 비표준어로 다루고 있다. 이 역시 어법의 타당성, 즉 '닥다'(?)가 아닌 '달다'(閉)에 강제 접사 '-치-'가 붙은 말이라는 논리적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치다'로 말하지 않는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는다. 말은 때로 기원적 모습에서 멀어질 때가 있다. '앵도(櫻桃)'가 '앵두'로 변화되기도 하고, '살팽이'가 '살팽이'로 바뀌기도 한다. '닥치다'도 그런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 이렇듯 사전상의 표준어가 실제의 언어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일 때 그 규범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언중은 비표준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입에 익어 버린 말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법가나 국어 순화론자의 규범서도, 규범 정립의 일정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논리에 빠질 때가 많다. 이를 테면, 어떤 이는 '넓은 廣場'은 잘못된 표

현이라고 주장한다. ‘廣場’의 ‘廣’이 이미 ‘넓다’는 뜻을 가지므로 ‘넓은’이라는 한정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被殺되다, 被殺당하다’를 ‘被殺하다’의 잘못으로 못박는다. ‘被’가 ‘당할’ 또는 ‘입을’ 피이므로 ‘당하다’나 ‘되다’와 의미상 중복된다는 이유로! 위의 표현들은 분명 언어 정보적인 면에서 잉여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후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규범의 잣대를 들이대어 오류어라는 판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좀더 생각해 볼 일이다. 강조 어법으로 ‘넓디넓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살아 生前’과 같은 표현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또 話者가 어떤 광장이 일반적 크기나 자신의 예상에 비해 클 때 “이 광장은 아주 넓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때의 ‘넓다’는 ‘廣’과 전혀 중복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운동장에서 운동하다’에서 ‘운동장’과 ‘운동하다’가 각각 별개의 정보인 것과 같다. ‘피살당하다’의 경우도 불필요한 중첩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참을 차다, 꿈을 꾸다’에서 목적어와 서술어가 同語 反復적으로 호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문법적 오류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살을 당하다’도 그 비슷한 유의 호응 관계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더구나 사람들은 “그는 테러범에게 피살되었다.”를 “그는 테러범에게 피살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만일 압도적 다수가 ‘피살하다’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압도적 다수의 언어 행위는 선형적 논리나 연역적 문법론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 규범론자들은 때때로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하고 현실로서 존재하는 언어 사실보다 형식논리에 집착하곤 한다. 이는 올바른 규범의 수립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일이다.

규범론의 경직성은 순화론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말이 외래의 것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리하여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한자어마저 불순의 요소로 바라본다.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순수가 가능한 것일까?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일까? 순화론자들은 이런 물음에 대해 거의 회의가 없어 보인다. 그들은 바위처럼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한자어 몰아내기를 목청껏 외친다. ‘음’을 ‘소리’로, ‘미소’를 ‘웃음’으로, ‘저의’를 ‘속셈’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어의 순수성과 고유성을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 그러나 ‘음’은 남의 것이요, ‘소리’만이 나의 것이라 믿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이다. 남의 것이 내 안에 동화되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음’은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한자어이다. 그리고 ‘음’과 ‘소리’는 순화론자가 생각하듯 완전 동의어가 아니다. 완전 동의어란 무엇인가? 어떤 문맥에서도 상호 환치가 완벽하게

이뤄지는 말이 아닌던가? ‘소리’는 ‘음’보다 그 개념의 외연이 넓고, ‘음’은 ‘소리’보다 그 내포가 크다. 소리는 ‘음·음성·음향…’ 등을 포함하지만, 음은 소리의 일부이거나 특수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밖에서 팡 하는 소리가 들렸다.”를 “밖에서 팡 하는 음이 들렸다.”로 환치하기 어렵고, 거꾸로 ‘악기가 연출하는 음의 세계’를 ‘악기가 연출하는 소리의 세계’로 바꾸기 어렵다. 또한 순수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음’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리’라는 말이 도태되거나 말살되는 것이 아니다. ‘소리’는 여전히 ‘음’보다 빈도 높은 주요 어휘이다. 양자는 상호 보충적 관계를 가지며 각기 독자적 의미 영역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한자어들을 무조건 순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쉬운말 쓰기란 특정한 목적, 예컨대 학교 교육이라든지 행정 용어 순화와 같은 차원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 언어 생활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한 나라의 어휘를 불과 몇천 개의 기초 단어로 환원해 버린다면 섬세한 사유와 풍부한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빈약한 어휘로는 결코 웅숭깊은 생각을 담아 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남의 것을 아무 여과 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자는 것은 아니다. 남의 것의 수용은 나의 것에 대한 강한 사랑과 확고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래어랄 수조차 없는 외국어의 남용이나 일본 한자어의 분별 없는 사용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근자에 신문·방송 등에서 ‘向後·一應·手順·仕様…’과 같은 일본식 한자어를 예사로 쓰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올바른 언어 생활을 앞장서서 제도해야 할 언론 매체가 그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 이 일본 한자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폐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文學·哲學·心理學·宇宙·物質·自由·法則·病院…’ 등은 개화 이후 오랫동안 우리 국어 속에서 쓰여 온 말이다. 이것들을 일본 한자어라는 이유로 일거에 몰아낸다는 것은 무모하기조차 한 일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立場·納得·役割’ 등의 일본 한자어와 같이 각기 그 대응어로서 ‘處地·理解·구실’과 같은 전통적 한자어나 순 우리말이 양립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다. 이에 대해 순수주의자들은 단호히 前者의 폐기를 주장한다. 그런데 과문의 타인지는 모르나 많은 국어 학자들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일본 한자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보편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어느 선까지 용인하고 어떤 단어를 취하고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입장·납득·역할’과 같은 말이 ‘문학·철학…’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말 속에

꽤 깊이 동화되어 있으며 사용 빈도면에서도 ‘처지·이해·구실’보다 결코 못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까다롭게 느껴진다. 어쨌든 순수주의자들의 단호한 폐기론에도 불구하고 좀더 진지하고도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말 규범의 실상을 개략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요컨대 우리말 규범은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더욱 다듬어지고 보강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그에 대한 노력은 실천 이론가들만이 아니라 전문 국어학자(지금까지는 학자들의 실용 언어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미진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은 유관 기관 등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지나친 흑백의 논리, 선형의 논리로 언어 현상을 재단하는 규범론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이 넓거나 작아져서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거북하고 부자연스런 구각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